

‘근대의 이중과제론’ 논의의 발전을 위하여

김명환**

대학과 학문사회의 역할을 생각하며*

초록 이 논문은 1966년 『창작과비평』 창간 이래 60년 가까이 문학평론가이자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백낙청의 담론인 ‘근대의 이중과제론’을 검토하며 그 실천적 의미를 따져 본다.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는 1998년에 처음 정식화되어 제출된 담론이지만, 그의 저작 전반에 걸쳐 동일한 문제의식이 관통하고 있다. 특히 분단극복을 목표로 한 ‘민족문학론’의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1990년대 전후에 ‘분단체제론’에 대한 인식에 도달했고, 분단체제론의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국가연합의 구상이 이중과제론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이중과제론은 당대의 사회과학자들과의 학문적 논쟁만이 아니라 상이한 정치적 입장과의 논쟁 과정을 거치며 성숙해갔으며, 생태적 문명대전환을 둘러싸고 『녹색평론』을 주도하던 김종철과의 논전을 통해서도 구체화되어 왔다.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지금의 현실에서 한국의 대학과 학문사회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이중과제론이 제기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세와 투철한 지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주제어 백낙청, 근대의 이중과제론, 분단체제론, 변혁적 중도주의, 남북연합, 적당한 성장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이 글은 백낙청의 담론인 ‘근대의 이중과제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백낙청은 1966년 계간지 『창작과비평』을 창간한 이래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영문학자, 문학평론가, 비판적 지식인이자 시민운동가로서 자신의 지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발언하고 행동해 왔다. 그는 초기의 시민문학론에서 시작하여 민족문학론을 세우는 과정에서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과 적극적으로 맞서는 노력을 해 왔으며, 1990년대 초부터 자신의 담론을 한 걸음 더 밀고 나아가 서로 깊이 연관된 담론, 즉 ‘분단체제론’, ‘근대의 이중과제론’, ‘변혁적 중도주의’를 제기하며 연마해 왔다. 동시에 이 담론들은 최근에 더욱 뚜렷해진 ‘개벽’에 관한 사상적 모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¹

근대의 이중과제, 즉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라는 백낙청의 담론이 우리 지성계에서 주변적 지위에 그친 것은 아니지만 폭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를 ‘좌파 이론가’로 모는 낡은 이데올로기적 매도는 논의거리가 아니지만, 그의 저작은 대학 등 제도권 학계에서 활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무관심의 원인을 본격적으로 분석할 자리는 아니지만, 적어도 왜 대학과 학문사회에서 백낙청 담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지는 따져 봐야 한다.

돌이켜 보면 1960년의 4월혁명이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으로서 우리 학문과 대학이 식민 지배와 분단, 전쟁이 강제한 식민성과 후진성 극복에 결

1 백낙청은 평론 활동 초기부터 관심을 가진 불교, 동학, 원불교 등에 대한 공부를 지속한 끝에 최근에는 동학 이래의 ‘개벽사상’에 대한 탐구의 깊이를 계간 『창작과비평』의 좌담 [(백낙청·김용욱·박맹수(2021), 「다시 동학을 찾아 오늘의 길을 묻다」, 『창작과비평』 가을호(통권 193호)]이나 유튜브의 ‘백낙청TV’에서 보여 주고 있다. 자신의 박사학위 주제였던 20세기 영국작가 로런스(D. H. Lawrence)의 문학을 탐구한 최근 저서(『서양의 개벽사상가 D. H. 로런스』, 창비, 2021)에서 로런스를 ‘개벽사상가’로 이름 붙였으며, 그보다 앞서 원불교 교무인 박윤철(박맹수) 전 원광대 총장이 원불교와 관련된 글을 엮어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개벽: 백낙청의 원불교 공부』(모시는 사람들, 2016)를 내기도 했다.

정적인 힘이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마찬가지로 1970~1980년대에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화운동이 학문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쳐 낡고 체제순응적인 학문 풍토를 뒤흔들었다. 당대의 급진적 운동이 지녔던 비전과 역량의 역사적 한계는 따로 평가할 일이지만, 민주화운동에 조용하는 학술운동의 흐름은 상당한 학문 성과의 축적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선진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그러나 2016~2017년 촛불대항쟁의 엄청난 에너지가 대학과 학문연구에 가져온 긍정적 변화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미미하다. 물론 촛불대항쟁의 기세는 '촛불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한계와 실책, 그로 인한 2022년의 정권교체로 말미암아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4월혁명은 5·16군사쿠데타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성계와 학문사회에 막중한 역사적 영향력을 발휘했고, 이후의 민주화운동 역시 1972년의 친위쿠데타나 1980년의 광주항쟁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의 대학과 학문이 왜 과거와 달리 촛불로부터 뚜렷한 변화의 자양분을 얻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는 의문이 떠오른다.

이 물음에 대한 본격적 고민이 없는 대학의 현실을 놓고 과거에 활발했던 학생운동의 부재나 시장주의에 물든 대학과 학문사회의 타락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다소 안이한 진단이라고 본다. 이 같은 진단은 물론 대학과 학문사회가 그동안 이룬 성취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의 구체적 현실과 괴리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하지만 촛불의 에너지가 학문사회에 몸담은 이들에게 뚜렷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은 우리가 안팎으로 처한 전환기적 과제가 그만큼 엄중하고 복합적이어서 이제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더 치열한 지적·정신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오늘의 인류 사회는 근대의 모순이 초래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빈발하는 산불과 가뭄, 폭우와 홍수 등이 보여 주듯이 기후-생태 위기는 경악할 증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나라를 가리지 않는 극우 포퓰리즘의 득세 등 전후 자유주의적 질서의 붕괴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며 인류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국내로 시야를 좁히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해 기울인 노력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물거품이 될 참이며, 현 정부의 일방적 대외정책에 따라 고조되는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은 정치·군사적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운용에서도 불안을 한껏 키우고 있다.

이처럼 냉엄한 안팎의 정세에 비춰 볼 때 한국 사회의 모순적 특성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백낙청은 이런 특성을 선진국도 후진국도 아닌 특이한 ‘분단국’의 전형적인 징후라고 말하는데,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세계 6위 수준의 군사력과 군수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희한한 사실이 단적인 사례다.² 성공적 산업화와 경제 활력, 한류와 한국어 붐, 코로나19 방역이 입증한 높은 시민의식과 대응 능력, 그리고 이 모두를 떠받치는 민주주의의 진전에 주목하면 우리는 선진국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성공 이전의 문제도 많았으며, 빈번한 산업재해와 비정규직 양산이 드러내는 노동 착취와 노동천대, 낮은 성평등 지수와 여성 혐오, 이주민과 난민 홀대, 추락 일변도인 출생률, 노인 빈곤율, 자살률, 청소년이 겪는 비인간적 입시경쟁 등은 낮은 독서율과 함께 도무지 선진적이 아니며, 몇몇 지표들은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이처럼 복잡한 우리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인문정신에 터한 인식—이 절실한 전환기에 서서 백낙청의 담론, 그중에서도 근대의 이중과제론(이하 ‘이중과제론’)을 따져 보는 작업은 우리 대학과 학문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백낙청의 담론과 그 담론이 씨름하는 현실적 과제에 대한 학문적 탐구는 나라 안팎의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지적·정신적 풍토를 넘어서는 노력의 일환이며, 대학과 대학인의 자기역할을 책임 있게 다하는 일일

— www.kci.go.kr

2 백낙청 외(2023), 『백낙청 회화록 8: 2017~2022』, p. 189.

것이다.

이중과제론의 문제의식이 백낙청의 저작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므로 이 작업은 한 편의 논문으로는 감당하기 곤란하지만, 이 주제를 다룬 글들에 집중하되 관련된 대담이나 좌담 등도 활용하며 처음 접하는 연구자도 접근하기 쉽게 풀어 가려고 한다. 또 이중과제론의 단순한 해설에 그치지 않기 위해 가급적 쟁점 중심으로 논쟁의 맥락을 고려하며 서술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어디까지나 문학 연구자로서 문학과 예술에 대한 탐구 작업의 일환인 동시에 인문학—학문 분류상의 인문학이 아니라 모든 학문을 관통하고 아우르는 지적 모험이자 상상력의 인문학—의 고유한 실천적 차원을 의식한 것이라는 점 역시 미리 강조하고 싶다.

2. 이중과제론의 성립 과정

1990년대 들어 율곡을 드러낸 이중과제론은 근대자본주의의 대안임을 내세우던 현실사회주의권이 1980년대 말부터 무너지면서 극에 달한 비판 근대주의의 지구적 대세를 거스르는 비판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중과제론은 근대의 위력에 굴복하지 말고 근대극복의 전망을 지키되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근대에 적응함으로써 극복의 역량을 보존하고 키워 실천에 나서자는 주장, 즉 근대주의가 그 어떤 근대극복의 의지와 전망도 꺾어 버릴 만큼 위세를 떨치는 정세에 대한 적극적 응전이었다.

백낙청 자신은 이중과제론을 처음 제기한 시점을 1998년 12월 미국 뉴욕주립대 빙엄튼의 페르낭 브로델 센터가 주최한 “트랜스모더니티, 역사적 자본주의, 식민성: 탈분과학문적 대화”(Transmodernity, Historical Capitalism, and Coloniality: A Post-disciplinary Dialogue)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로 잡는다. 여기서 내놓은 영문 발제는 다음 해에 우리말로 바꿔 보완을 거친 후 「한반도에서의 식민성 문제와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³라는 제목으로 활자

화되었다. 이 글과 함께 2014년의 강연을 토대로 2016년에 발표한 「근대, 적응과 극복의 이중과제」가 이중과제론에 관한 대표작 두 편이다.⁴ 물론 백낙청의 초기 평론부터도 이중과제론의 맹아가 엿보인다. 1960년대의 시민문학론은, 그 자신은 본격적인 민족문학론을 세우기 전에 근대주의적 경향을 탈피하려는 과도기적 모색에 그쳤다고 자평하지만,⁵ 서구 근대문학의 성취를 본받되 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자는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1990년대 이후의 글로 좁히면 서울대 민교협이 주최한 학술토론회 발표문에 기초한 「근대성과 근대문학에 대한 문제제기와 토론」(1993년)⁶과 「민족문학론·분단체제론·근대극복론」(1995년)이 본격적인 이중과제론 논의의 중요한 선형 문헌이다.⁷ 후자의 글에서 저자는 “한국의 지식계에는 아직 기별이 덜 된 느낌도 있지만, 근년의 제1세계 담론의 대세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밀려나고 신장개업한 근대주의가 무대의 중심을 되찾은 형국”⁸이라고 진단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략) 포스트모더니즘의 주류는 이런 근대극복 의지의 많은 부분조차 ‘근대적’이라고 낙인찍고 나머지를 탈정치화된 형태로 계승하면서 이제는 ‘탈근대’로 들어섰다고 주장하는 ‘왜곡’과 ‘세련’을 수행했다. 오늘의 비판 근대주의는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런 ‘발본적인 근대비판’마저 이겨냈다고 자부하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진정한 근대성’은 왕년의 근대화론에

3 백낙청(2021a),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 창비, pp. 83-107.

4 백낙청(2021a), pp. 27-52. 이 학술대회의 영어 발표문도 대폭 보완하여 해외 학술지를 통해 활자화되었다. Paik, Nak-chung(2000), “Coloniality in Korea and a South Korean Project of Overcoming Modernity,” *Interven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ostcolonial Studies*, 2(1), pp. 73-86.

5 백낙청 외(2017), 『백낙청 회화록 7: 2012~2017』, 창비, p. 235.

6 백낙청(2006a),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창비, pp. 87-131.

7 백낙청(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비, pp. 112-35.

8 백낙청(1998), p. 133.

서처럼 서구화로서의 근대화가 아니고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를 수용한 전지구적 민주사회의 건설, 즉 포스트모더니즘마저 제대로 지양한 범인류적 과제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근대화’가 이제는 공산주의에 이어 새로운 유사 세계종교 행세를 하게 된 것이다.⁹

문학 분야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소개된 포스트모더니즘 등 각종 ‘포스트 담론’의 유행은 1990년대 들어 국내외의 현실 변화를 계기로 이전의 민중·민족문학운동을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갖가지 양상을 뒷받침했으며, 작품 생산에서 현실순응적이거나 관념적인 경향이 득세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백낙청은 1980년대 이래 자신을 ‘소시민적 민족문학’으로 몰아간 급진적 문학론들의 비판을 이겨내는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과 신판 근대주의를 동시에 넘어서는 이론적 도약을 발빠르게 시도했던 것이다.

「근대성과 근대문학에 대한 문제제기와 토론」은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마셜 버먼(Marshall Berman),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 페리 앤더슨(Perry Anderson) 등 서구 이론가들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거론하면서, 만해 한용운과 벽초 홍명희를 비롯한 우리 근대문학의 최고 성과를 “근대성과 탈근대지향성의 적절한 결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인직이나 이광수가 근대주의에 치우치고 말았고 근대를 외면한 위정척사파에서도 진정한 문학적 성과가 불가능했지만, 만해나 벽초처럼 “전통문화에 깊이 뿌리박은 반외세정신에다 근대성의 과감한 수용을 겸한 작가들”¹⁰은 민족문학의 주류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대성과 탈근대지향성의 결합 양상’이라는 다소 난해한 표현은 토론회 당시 논평자들로부터 오해를 사거나 비판을 받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

9 백낙청(1998), p. 134.

10 백낙청(2006a), pp. 112-113.

는데,¹¹ 백낙청은 훗날 이중과제론이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이라는 명료한 표현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근대 및 서양 근대문화에 대한 양가적이고 복합적인 정서가 곧바로 이중과제론을 낳은 것은 아니다. 내 경우 처음에 **민족문학론의 형태로 이론화되었다가 범한반도적 현실을 해명하는 개념인 분단체제론으로 진화했으며 이것이 근대세계 전체에 관한 이중과제론으로 발전**(강조는 인용자)했다. 그 궤적을 초기 단계에서 정리한 것이 주 2에 언급된 줄고 「민족문학론·분단체제론·근대극복론」이다. 하지만 이때도 “근대성의 성취와 근대의 극복이라는 ‘이중적 과제’ 설정을 민족문학론 및 분단체제론의 연장선상에 놓음으로써 추상적인 구호 이상의 내실을 담으려 했다”고 자부하면서도 ‘근대극복과 근대적응의 이중과제’라는 정확한 표현을 찾아내지는 못했던 것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근대성의 성취와 근대의 극복’이라는 용어 선택인데,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동시적 수행’과 대동소이한 것이지만 성취의 대상은 ‘근대’가 아니고 특정한 ‘근대성’이고 극복대상은 ‘근대’로 되어 있다. 하지만 자칫 부질없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설정이었다. 곧, 극복의 대상은 근대 자체지만 성취하자는 것은 근대가 아니고 그 시대의 일정한 특징들인 **근대성**이라는 취지가 흐려질 수 있고, 이중과제가 먼저 근대를 성취한 다음에 극복으로 나가는 순차적 작업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에는 성취함직한 특성뿐 아니라 식민지 수탈, 노동착취, 환경파괴 등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들도 있으므로 그 둘이 혼재하는 근대에 ‘적응’한다는 것이 더 타당한 표현이며, 성취와 부정을 겸하는 이러한 적응 노력은 극복의 노력과 일치함으로써만 실효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¹²

11 백낙청 외(1993), 「한국 근대사회의 형성과 근대성 문제」, 『창작과비평』 겨울호(통권 82호), pp. 48-91 참조.

12 백낙청(2021a), pp. 33-34.

다소 길게 인용했지만 이처럼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최종적인 정식화는 발표된 글에 국한해도 1993년부터 1998년까지 5년 이상의 연마 끝에 완성되었다. 또 위 인용문이 밝히듯이 기존의 민족문화론이 1980년대 말 이래 분단체제론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중과제론이 탄생한 것이니 실제로는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렸다.¹³ 이중과제론의 성립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단체제론을 함께 살펴야 하지만, 논의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지면이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주로 분단체제론의 '남북연합' 구상을 이중과제론과 연관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3. 분단체제론의 '남북연합': 이중과제론의 맥락

백낙청은 분단체제 극복과정에서 성립할 한반도의 새 국가가 민주적이고 자주적일 뿐만 아니라 단일형 국민국가가 아닌 복합국가, 즉 느슨한 국가연합으로서 '남북연합'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연합은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나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 등 남북이 체결한 주요 문헌에 담긴 핵심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종종 비판과 냉대를 당하는 발상이다.

이중과제론과 깊이 얽혀 있는 남북연합의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분단체제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앞세울 필요가 있다. 문학운동을 포함하여 우

13 이우창, 천정환 등의 문학연구자가 최근의 글에서 이중과제론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천정환은 이중과제론이 "근대의 완수"(p. 73 각주 39)를 목표로 한다는 엉뚱한 오해에 그친다. 이우창은 이중과제론이 "비록 제한된 인원에게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시적 처방에 가까웠지만, 맑스주의로부터의 해방이 곧바로 반서구근대주의 혹은 전통에의 복고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브레이크에 가까웠다"(p. 105)고 평가하는데, 다른 것을 떠나서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 다듬어진 이중과제론을 '일시적 처방'으로 보는 것은 빛나간 판단이다. 천정환(2018), 『탈근대론과 한국 지식문화(1987~2016): 전개 과정과 계기들』, 『민족문화사연구』 통권 67호, pp. 55-96; 이우창(2017), 「'서구 근대'의 위기와 한국 동아시아 담론의 기이한 여정: 민족문화론에서 반민주주의론까지, 1989-2017」, 『코기토』 83, pp. 58-116.

리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한반도 분단현실에 대해 투철한 인식을 가져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백낙청의 지론임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담론을 모든 문제를 분단 탓으로 돌리는 분단환원주의로 몰아붙이는 잘못된 통념은 여전하며, 심지어 분단극복 운운은 이제 시대현실에 맞지 않은 감상적인 통일론, 낡은 민족주의적 감성에 불과하다는 왜곡도 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남북관계가 금세기 들어 최악인 이 시점에서 분단을 논하고 분단체제를 따지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냐는 공박도 나올 법하다.

이런저런 오해와 비판에 대한 분단체제론의 간명한 답은, 바로 지금의 혼란스러운 국내 현실이야말로 남북관계의 발전이 남쪽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개혁을 추진하는 작업과 얼마나 깊이 상호연관되어 있는지를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국내의 기득권 수구세력은 틈만 나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들며,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세력이 설사 있어도 그러한 퇴행을 정치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것이 분단체제의 특징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나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의 정치적 맥락이 뚜렷한 역사적 증거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남북교류를 발전시키고 비핵화의 방도를 모색하는 일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 필수적이며, 한·미·일 협력관계 강화에 맞서 북·중·러의 상호접근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의 시점에서 더더욱 분단체제 극복의 노력은 접을 수 없다.

분단체제론의 남다른 의의는 말 그대로 분단의 **체제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 촉구했다는 사실이다. 백낙청은 해방 직후의 민족사적 당면과제였던 통일된 근대국민국가의 성취라는 전망에 머물렀던 민족문화론의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분단의 체제적 성격에 대한 객관적 인식에 입각하여 단순한 분단극복이 아닌 분단체제극복의 전망을 세울 필요를 절감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과학자들과 여러 차례의 논쟁을 주고받기도 한다.¹⁴

그러한 고투의 결과가 분단체제론이며, “분단은 외세의 개입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오래 지속되면서 남북한 내에 분단을 재생산하는 내부적인 요인들이 축적”¹⁵되어 말 그대로 분단이 하나의 체제로서 작동하게 되었다는 답론인 것이다. 분단체제론의 특징은 분단체제의 모순과 대립구도 설정에서 드러나는데, “남과 북의 국가간의 대립이라든가 또는 진영간의 대립, 이런 것을 핵심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분단체제라는 것이 한반도 전체에 걸쳐 있고 그 체제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과 그로 인해 억압받는 민중이 남북 양쪽에 다 있다는 식으로 발상을 바꾸자는 문제제기”¹⁶이다. 즉 분단체제의 모순과 대립의 기본구도는 ‘남북의 민중 전체 대 한반도를 지배하는 분단체제’이지만, 그 안에서 다시 복잡한 모순관계들, 예컨대 남의 정권과 민중의 대립, 북의 지배체제와 인민의 대립 등이 존재하며 이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벌인다. 따라서 분단체제 해체는 단순한 일차방정식이 아니라 고차원의 다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이다.¹⁷

더불어 강조할 점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군사독재 종식, 냉전체제 해체 등에 따라 한반도의 강고한 분단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동

14 백낙청(2021; 1994),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pp. 17-54 참조; 손호철 교수와의 논쟁은 백낙청(1998)의 3장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의 한반도 정세와 분단체제론」, pp. 83-111; 김영호와의 논쟁은 9장 「김영호씨의 분단체제론 비판에 관하여」, pp. 200-208; 이수훈 교수와의 논쟁은 백낙청(2006b) pp. 137-154. 이외에도 독일 철학자 하버마스의 방한 강연에 대한 비판으로 백낙청(1998)의 7장 「독일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하버마스의 견해」, pp. 172-186. 참고로 이 글은 『뉴 레프트 리뷰』(New Left Review) 1996년 9·10월호 (통권 1/219호)에 하버마스의 강연과 함께 실린 글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Paik (1996), pp. 14-21.

15 백낙청 외(2007b), 『백낙청 회화록 4: 1997~2004』, p. 312.

16 백낙청 외(2007c), 『백낙청 회화록 5: 2005~2007』, p. 182.

17 이 과업의 어려움을 논할 때, 분단체제가 체제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분단구조가 문자 그대로 남북 주민 모두의 일상생활에 그 나름의 뿌리를 내렸고 그리하여 상당수준의 자기재생산 능력을 갖추었다”(백낙청, 1998, p. 18)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달리 말해, 분단체제는 나름으로 전쟁 역지력을 가지고 남북 주민의 생존을 뒷받침해 온 체제이기 때문에 그 억압적 성격만을 분다면 일면적 인식이 될 위험이 있다.

요하는 분단체제를 1987년 이전의 상대적 안정기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¹⁸ 물론 현 정부가 분단체제를 재안정화하려고 맹렬히 노력하고 있지만,¹⁹ 그것은 성공하기 힘든 위험한 시도이며 만약 성공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한반도 주민에게 분단체제보다도 훨씬 못한 체제로 귀결될 것이 틀림없다.

분단체제가 이처럼 흔들리는 가운데 남북연합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 마디로 남북연합 외에 분단극복의 다른 방법이 없다는 냉엄한 현실 때문이다. 현실사회주의권이 붕괴된 1990년대 초 이후 남쪽의 집권층은 물론이고 진보진영에서도 ‘흡수통일’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경향이 팽배해졌으며,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백낙청은 이미 1990년대 말에 이런 생각에 단호히 맞선 바 있다. 즉 “북한의 흡수를 통한 독일식 통일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자칭 현실주의자들이야말로 정녕 현실감각의 결여를 드러내고” 있으며, “북한 지도층이 흡수당하는 통일보다는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든가, 서독과 비교할 수 없이 한정된 능력을 갖춘 남한이 동독보다 더 부담스러운 북한이라는 짐을 떠맡을 때 남한경제가 파산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현실”²⁰을 제멋대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북의 공식이념에서나 살아남아 있지만, 남한이 칼자루를 쥐는 흡수통일도 전쟁이나 남한경제의 몰락 가능성이 너무 커서 선택지가 될 수 없으며, 북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된 현재는 더욱 그렇다. 북한이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체제 고수에 성공한 점 역시 분단체제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격렬한 전쟁 끝에

18 백낙청(1998), 1장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일상화를 위해」, 2장 「IMF시대의 통일사업」 등 참조.

19 이남주(2023), 「문명 전환 시대, ‘한국’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창작과비평』 가을호 (통권 201호), pp. 17-34.

20 백낙청(2021a), p. 94; 백낙청(2021; 1994), pp. 33-36.

남북대결을 포함한 심각한 외부 위협 아래 살아온 북한은 강요된 ‘농성체제’를 다수 주민이 받아들이는 사회다. 그 점에서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쉽사리 사라진 동구 사회주의국가들과 성격이 크게 다르며, 특이하고 자생력을 지닌 ‘농성체제’는 분단체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한 축이다. 따라서 전쟁도 혁명도 흡수통일도 아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 방안이 필요하며, 그것이 다름 아닌 남북연합이다.

남북연합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이유는 북한의 개혁·개방은 중국이나 베트남 사례와 달리 남한의 존재라는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²¹ 중국에게 대만은 위협적 존재가 아니며 베트남은 통일 후에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참여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 건설을 위해 개방을 시도할수록 자본주의 시장권에 포섭되면서 남한의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강화되어 북의 체제를 이완시킬 공산이 높으며, 정세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남북 간의 긴장은 위협 수위에 가깝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모델을 따라가리라는 통념은 남한이라는 변수를 외면하는 안이한 논리이다. 이런 현실적 조건에서 분단체제극복운동은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가운데 극히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감당할 관리장치가 바로 남북연합인 것이다.

이중과제론의 언어로 남북연합의 구상을 풀자면, 분단체제 극복과정에서 생겨나는 북합국가 내지 국가연합은 전쟁을 방지하고 남북 주민 모두의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면에서 근대적응의 과제 달성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남과 북 각자의 약점과 한계를 뜯어고칠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근대극복의 가능성을 여는 사업이다. 백낙청은 2000년의 6·15남북 공동선언의 2항, 즉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21 백낙청(2009),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시민참여형 통일」, 『어디가 중도며 어찌서 변혁인가』, 창비, pp. 199-203; 백낙청(2021a), pp. 332-334.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가 점진적이고 창의적이며 평화적인 길을 위한 현명한 합의였음을 강조한다.²² 남북의 지도자들이 이 합의의 의미를 얼마나 분명하게 인식했는가와는 별개로 이 조항의 모호함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서 미래의 통일국가 형태에 대한 논란을 제거한 절묘한 타협이었으며, 덕분에 4항이 규정하는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더 원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교류협력을 통해 실질적 통합을 진전시키다가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었을 때 남북연합에 합의하면 그것이 곧 한반도식 통일, 더 엄밀히 말하면 ‘제1단계 통일’의 달성이 된다. 물론 이것은 느슨한 국가연합이어서 남북은 각각 자신의 헌법과 정부, 군대를 유지하며, 서로 합의하는 영역에 국한하여 남북연합이 전체 한반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백낙청은 이처럼 독특한 한반도식 통일에 대해 나올 두 가지 반론을 거론한다. 하나는 “설혹 남북연합이 선포되더라도 그 실제 내용은 현재의 유럽연합보다 훨씬 느슨한—예컨대 단일화폐도 없고 주민이동의 자유도 크게 제약되는—연합이 될 터인데 그것을 ‘통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말장난이 아니냐”는 반박이고, 다른 하나는 “2005년 8월 또는 9월의 성과 [9·19북미공동성명-인용자가 썼다고는 해도 뒤이어 한국 내부에서 벌어진 보수층의 대대적인 이념공세나 북미관계의 악화, 특히 미국 행정부의 더욱 노골화되는 대북강경노선에 비추어, ‘1단계 통일’이라 부르건 말건 그 정도의 통합조차 요원한 것이 아니냐는 정세판단상의 반론”²³이다.

전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백낙청은 “유럽연합은 각각의 국가가 통일된 주권국가로 일단 성립한 상태에서 그 나라들이 합쳐나가는 연합인 데 비해, 남북의 국가연합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한 민족, 한 국가로 살아오던 한반도 주민들이 외세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었다가 합쳐가는 과정이

22 백낙청(2006b), 「한반도의 통일시대와 한일관계」, p. 35.

23 백낙청(2006b), p. 35.

기 때문에 작용하는 동력이 전혀 다르다는 것”, 즉 “화폐의 통일이나 이동의 자유는 없어도 언어의 통일과 문화적 체질의 통일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고, 궁극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가 전제된 연합”이라는 큰 차이를 지적한다. 그만큼 작은 성과들이 축적되는 가운데 통일로 가는 구심력의 형성은 남달리 강하고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백낙청은 후자의 반론에 대해서는 “애초의 남북분단은 분명히 외세, 특히 미국의 압도적인 힘으로 강요된 것이 사실이지만, 일정하게 체제화된 오늘의 분단구조는 미국에 의해서만 지탱되는 현실이 아니며”, “그 해체과정 또한 미국이 전적으로 좌우할 수 없다”²⁴는 사실을 강조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에 나선 으뜸가는 이유는 남의 촛불대항쟁으로 인한 정권교체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동시적인 전환을 기대했기 때문이지 결코 미국의 정책 변화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 점을 잘 보여 준다. 비록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비핵화 등의 주요 사안은 남북관계 아닌 북미관계에서 돌파구가 나와야 하지만, 남북연합을 지향하는 남북 간의 신뢰와 접근은 한반도 평화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²⁵

이중과제론의 관점에서는 1단계 통일인 남북연합이 곧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종말이나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서의 완전한 이탈을 의미하지 않는

24 백낙청(2006b), pp. 35-40.

25 백낙청은 2016~2017년의 촛불대항쟁을 시발점으로 ‘촛불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독특한 시각을 개진한다. 이는 촛불대항쟁 자체가 곧바로 혁명이라는 주장은 결코 아니지만, 대항쟁 이후의 역사 전개가 어떤 면에서 혁명적 면모를 지니는지를 항상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릇된 정세 판단에 빠져 올바른 실천으로부터 멀어지고 만다는 입장이다. “이게 나라냐”며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고 나선 촛불시민들의 거센 요구는 “분단체제에서 ‘안보’를 위해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일종의 ‘이면헌법’이 작동해온 상황”(백낙청, 2021a, p. 441)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분단체제를 결정적으로 허물어뜨리는, 혁명의 이름에 어울리는 사태인 것이다. 백낙청의 촛불혁명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그의 답론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백낙청(2021a), 서장 「촛불혁명과 개벽세상의 주인노릇을 위해」, 2장 「3·1과 한반도식 나라만들기」, 10장 「촛불’의 세세상 만들기와 남북관계」, 및 제4부의 관련 단평들 참조.

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분단체제 극복은 한반도의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대적응이지만, 근대의 모순이 독특하게 응집된 분단체제의 해체는 그다음 단계로서 근대극복의 가능성을 열어젖히게 된다.²⁶ 남북연합은 자본주의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는 체제이지만 “우선 이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니깐 일단 그걸 인정하고 적응하면서 살아남아 극복하자”²⁷는 현실적 자세를 전제하며, 남북연합 이후의 단계들은 그때 가서 결정할 열린 과정으로 남겨 두자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남북연합’ 건설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참여형 통일’이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백낙청은 시민참여형 통일에 대해, “전쟁을 통해서든 평화적으로든, 단번에 해 버리면 그것은 정부당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열린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 우리 각자가 거기에 얼마만큼 기여하는가에 따라서 속도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민주적인 통일방식이고, 또 보통사람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통일사회를 건설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²⁸라고 말한다. 실제 시민참여형의 통일과정(어느 단계에 가면 북의 인민도 정권과 어긋나는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아니라면, 남북연합은 근대극복의 계기가 증발된 비전이 될 위험을 면할 수 없고, 결국 잘 포장된 ‘흡수통일론’이 되기 십상이다.

백낙청은 시민참여형 통일과 직결되는 차원에서 ‘변혁적 중도주의’를 남북연합을 이룰 실용적인 노선으로서 제기한다. ‘변혁적 중도주의’는 분단체제 극복을 감당할 역사적 주체를 우리 현실에서 폭넓게 찾아내는 시도로서 “한반도적 시각을 가진 실용주의”²⁹인데, 6월항쟁 이후 민족문학의 새 단계 논의 과정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는 1980년 광주 이후 성장하던

26 백낙청 외(2017a), 『백낙청 회화록 6: 2007~2012』, p. 53, pp. 107-108.

27 백낙청 외(2017a), pp. 107-108.

28 백낙청(2009), p. 280.

29 백낙청 외(2023), p. 202.

민중문학과 민족문학의 흐름을 두고 「민중·민족문학의 새 단계」(1985년)에서는 우리 문학이 아직 “새 단계에 제대로 올라서지는 못했고 바로 그 목전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된다”³⁰고 평가한바, 당시의 급진적 문학론들이 보여준 조급성을 비판함으로써 ‘소시민적 한계’에 갇혀 있다는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6월항쟁 후에 쓴 「통일운동과 문학」(1989년)에 이르면 민족문학의 새 단계가 드디어 열렸다는 판단을 내린다. 그 근거는 우리 현실의 질적 변화, 즉 (3·1운동과 달리 한반도 남쪽에 국한되었지만) 전국적 항쟁으로 군사독재가 무너진 후 ‘신군부’ 출신 대통령 당선이라는 실망스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와 분단극복운동이 맞이한 새로운 현실, 변혁적 중도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폭넓은 세력 연대의 가능성을 연 현실에 있다.

사실 6월 이후 정세의 가장 큰 새로움은, 그전부터 병존해온 세 가지 시각[중산층적 자유주의 시각,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강조하는 시각, 노동계급 주도성을 앞세우는 시각-인용자]이 6월의 승리로 확장된 역사공간 속에서 제가끔의 근거와 문제점을 한층 뚜렷이 드러내면서 새로운 종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이라 하겠다. 아니, 새로운 종합의 현실적 가능성을 비로소 열어 놓았다고도 할 수 있다.³¹

이처럼 변혁적 중도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변혁을 추구하는 다양하고 종종 상충하는 입장을 하나로 묶어 연대의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도’이지만, 동시에 그 실천이 현상 유지나 개량이 아니라 질적 변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분단체제를 허무는 ‘변혁’의 이름에 값한다. 그러므로 세 노선이 지닌 ‘제가끔의 근거와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해결함으로써 변혁적 중도주의를 구체화해야 하는 것이다.³²

30 백낙청(2022; 1990), 『민족문학의 새 단계』, 창비, p. 21.

31 백낙청(2022; 1990), p. 153.

32 6월항쟁 이후 지금까지 35년 이상 세 흐름이 합당한 연대를 이루지 못할 때마다 실망스

이 대목에 이르면 분단체제론과 변혁적 중도주의 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실제 사례가 대체 어디 있느냐는 물음이 나오게 마련이다. 백낙청과 손호철이 2006년에 주고받은 논전을 거론할 만한데, 쟁점은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이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사태로 빚어진 국가 위기 해결에 과연 도움이 되었느냐이다. 백낙청은 김영삼정부나 김대중정부가 모두 일단 IMF에 투항한 것도 사실이고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6·15선언이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반면에 손호철은 6·15선언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며, 6·15선언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 민중간의 교류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북 경제교류라는 남한자본에 의한 북한의 신자유주의적 흡수통일이라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시작됐다”면서, 독일식 흡수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리의 의지와 그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개연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비판적 입장을 고수한다.³³

러운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은 변혁적 중도주의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압도적 지지 속에 출범한 지난 정권이 선거법 개혁 등에서 (수구세력을 제외한) 다른 정치세력과 타협과 양보를 통한 탄탄한 연대 구축을 외면한 끝에 정권을 상실한 실패도 좋은 사례다. 그 실패는 진보정당운동에서 이른바 ‘자주파’와 ‘평등파’의 분열과 대립이 끼친 악영향 및 그로 인한 진보정당의 약화와 겹치면서 수구세력의 반격을 도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덧붙여 강조할 점은, 남북연합이 성립하여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북쪽의 인민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남쪽의 분단극복운동과 연대할 가능성이 주어진다. 이는 ‘분단체제의 기득권세력 대 남북한 민중’을 기본대립으로 설정하는 분단체제론의 논리에 부합하며, 그러한 연대가 술한 굴곡을 견뎌내며 남북연합이라는 관리장치가 잘 작동하게 할 동력인 것이다. 백낙청(1998), pp. 222-224.

- 33 손호철(2006), 「남남갈등의 남남갈등을 넘어서:[논쟁] 뉴라이트와 분단체제론의 비판적 고찰」, 『프레시안』, 2006년 11월 28일. 논쟁의 경과를 간략히 설명하면, 2006년 9월에 열린 ‘2006 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학술회의’(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한겨레통일문화재단 공동주최)에서 백낙청과 손호철은 발제자와 토론자로 만났으며, 백낙청은 발제문을 보완한 글을 『창작과비평』 2006년 겨울호에 「남남갈등에서 한반도 선진사회로: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손호철은 이 글에 실린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앞의 『프레시안』 기고로 답한 후 이 기고문을 정리하여 『진보평론』(겨울호, 통권 30호, pp. 216-230)에 수록했다.

즉 남북교류도 자본이 주도하는 것인 한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를 장악한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효과를 견제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백낙청은 논쟁 후 3년이 지나 정권도 바뀐 2009년에 제11회 한겨레통일문화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남북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킨 이명박정부 2년차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김대중정부 아래서 우리 국민이 실제로 선택한 길, 즉 금융위기를 계기로 흡수통일의 꿈을 접고 공안정국을 자제하며 남북의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자 한 길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실감할”³⁴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손호철의 비판에 대한 반론의 골자라고 봐도 좋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을지는 역사의 행로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판내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이전 보수정부들의 역주행을 바로잡으려다 좌절한 후 현 정부의 급격한 정책 선회가 한반도 평화나 국내의 민생과 민주주의에 끼치고 있는 악영향을 직시한다면 분단체제론의 현실적 타당성이 입증된다고 본다.

4. 이중과제론의 쟁점: 근대의 실상 이해와 근대극복의 위상

추상 수준이 높은 이중과제론의 특성상 쟁점과 연구할 과제가 넘친다. 그러나 지면을 고려하여 다음 절에서 다룰 『녹색평론』의 김종철과의 논쟁을 빼고 꼭 필요한 두 가지만 언급하려고 한다. 첫째는 ‘근대’의 실상을 깊이 이해하는 과제이며, 둘째는 이중과제론에서 근대극복이 차지하는 위상이다.

— www.kci.go.kr

34 백낙청(2009), p. 278.

근대에 대한 한층 깊이 있고 풍부한 이해는 이중과제론의 으뜸가는 과제이다. 백낙청은 근대 세계체제가 생겨난 이후에 우리는 이중과제에 맞부딪히지만 그러한 이중과제가 근대가 태동하여 성립하는 초기에도 적용되느냐는 물음, 즉 “16세기 서유럽에서 자본주의가 건설될 때, 단지 구체체를 지켜내기 위해 자본주의의 도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적응하면서 극복하는 이중과제가 이미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그는 자신의 역량으로 이 물음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다만 근대 세계체제의 탄생이 처음부터 무한대의 자본축적을 원리로 삼는 사회체제를 건설하겠다는 배타적인 목적의식의 결과이기보다는 자본주의가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가치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복잡다단한 노력들의 산물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 아닐까 한다”³⁵고 말한다. 그러므로 근대가 태동하던 시기의 위대한 서양 작가인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나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의 작품에서 이중과제적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백낙청은 셰익스피어가 “거대한 역사적 이행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에 수반되는 비극적 손실들, 그리고 다가오는 새 시대를 넘어설 필요성과 가능성을 일찍이 제시했다는 가설”을 제시하며, 세르반테스 작품의 주인공 돈 키호테가 “근대전환기의 적응에 실패한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출발하지만 근대에 순응하기를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얻게 되는 양면성”³⁶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중과제론의 무게중심이 어디까지나 근대극복이라는 점도 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백낙청은 이중과제론을 해외에서 처음 발표할 때 “the double project of simultaneously adapting to and overcoming modernity”, 간략하게는 “the double project of modernity”라고 표현했고, 우리말 표현을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35 백낙청(2021a), p. 49.

36 백낙청(2021a), p. 51.

‘project’를 흔히 쓰는 ‘기획’ 대신 더 자연스러운 우리말인 ‘과제’로 바꿨다. 그러나 “두 가지 과제의 **병행**이 아니라 **이중적인 단일 기획**임을 부각시키는 점에서는 영어의 단수명사 project가 더 적절한 면”³⁷도 있음을 짚는다. 이처럼 이중과제는 분리할 수 있는 두 과제의 병행이 아니라 이중적인 면을 지닌 단일한 기획이지만, 이중과제론의 초점이 어디까지나 근대극복, 즉 근대자본주의 세계체제를 넘어서는 일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는 앞 절에서 논했듯이 분단체제론의 변혁적 전망에 근대극복의 계기가 빠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다.

그러나 우리는 이중과제론의 이런 성격에 대한 몰이해와 종종 마주치게 된다.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을 단일한 과제로 삼는 일은 자가당착이니 더 따질 것도 없이 둘 중 하나만을 택해야 한다는 형식논리에 매몰된 시각도 있지만, 2020년대의 한국이 선진국이 다 된 마당에 ‘근대적응’ 운운은 시대착오이니 이중과제론은 이미 낡았다는 근대주의적 생각도 꽤 널리 퍼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중과제론에서 ‘근대적응’의 내용부터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근대에 ‘적응’(adapt to)한다든가 이를 ‘감당’(cope with)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규정하는 일부터가 만만찮은 과제다. 근대 세계체제가 끝없는 자본축적과 그에 따르는 경쟁의 논리를 외면하는 일정 규모의 집단(및 개인)들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심지어 파멸을 초래하는 한, 어쨌든 최소한의 적응과 경쟁력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겠다. 물론 **일단 그 과정에 뛰어들고 나서 과연 ‘최소한’에서 멈출 수 있을지는 까다로운 질문**으로 남는다. 동시에 근대는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그 자체로 본받을 만한 여러 가지 성취를 이뤄냈다는 점 또한 대체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적응’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견뎌내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³⁸ (강조는 인용자)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자본주의 근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최소한의 필요한 선에서 멈추는 일이 지극히 까다롭다는 문제이고(이 문제는 다음 절에서 ‘적당한 성장’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하여 다시 언급한다), 둘째, 적응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비롯된 바람직한 근대적 가치를 제대로 수용하고 실천하는 것 또한 의미한다는 점, 그래야 생존 자체도 가능하고 그때의 근대적응이 의미 있는 근대극복 노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처럼 복합적인 근대적응의 내용에서 이중과제가 얼마나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과제인지 실감할 만하지만, 동시에 이중과제의 초점은 근대극복에 있음을 거듭 명토 박아 둘 일이다. 이 점에서 2절의 마지막 인용문 끝의 “성취와 부정을 겸하는 이러한 적응 노력은 극복의 노력과 일치함으로써만 실효를 지닐 수 있다”는 문장을 거듭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5. ‘적당한 성장’을 둘러싼 논쟁

담론의 발전과 확산은 치열한 논쟁으로 단련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에서 『녹색평론』을 이끌다 3년 전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종철과 이중과제론을 두고 벌인 논쟁은 각별한 현재적 의미를 지닌다.³⁹ 핵심 쟁점은 백

38 백낙청(2021a), p. 97.

39 논쟁의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종철이 『창작과비평』 측의 요청으로 2008년 봄호 특집에 「민주주의, 성장논리, 農的 순환사회」를 기고한 후, 백낙청이 이어지는 여름호에 「근대 한국의 이중과제와 녹색담론」이라는 반론을 실었다. 김종철은 재반론을 하지 않았지만, 굳이 반박할 만큼 새로운 내용이 백낙청의 반론에 없더라는 취지의 발언을 다음의 대답에서 남겼다. 김종철·이문제(2008), 「이것은 문학이 아니다」, 『문학동네』 겨울호, pp. 26-65.

낙청의 '적당한 성장'이라는 발상인데,⁴⁰ 김종철은 이중과제론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백낙청은 “한번 나오하면 항구적인 약자로 전락하기 일쑤고 약자는 강자로부터 사람대접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존 세계체제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부자나라 따라잡기를 지상목표로 삼고 최대한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방어적 성장을 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실 이와 비슷한 뜻의 발언은 이른바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에 관해 계속해서 말해온 백낙청의 근년의 작업에서 자주 되풀이되어왔다.⁴¹

김종철은 이러한 전략에서 나온 '적당한 성장'이 “하나의 추상적 언술로서는 성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지는 전략인지 분명치 않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정말 필요한 것은, '적당한 성장'이든 아니든 성장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근대적 방식에 대한 '적응'을 말할 게 아니라, 성장논리와는 무관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 즉 비근대적 방식으로 방향전환하려는 급진적 노력”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앞절에서 인용한 백낙청의 발언, 즉 근대에 적응하며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추는 과정에 일단 뛰어들면 과연 '최소한'에서 멈출 수 있을지는 까다로운 문제라는 발언을 들어 백낙청이 “'적당한 경제성장'이라는 것이 실현되기 어려운 난제임을 시인하고 있는 셈”⁴²이라고 꼬집는다. 김종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쓴 추모의 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백낙청의 회상을 다

40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적당한 성장'이 성장 잠재력과 연관된 “적정 성장”이라는 주류 경제학의 개념과는 무관하며 이중과제 실천의 일환으로 제시된 개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백낙청(2021a), pp. 348-50.

41 김종철(2008), 「민주주의, 성장논리, 農的 순환사회」, 『창작과비평』 봄호(통권 139호), p. 81.

42 김종철(2008), p. 82.

소 길지만 살펴보자.

대체로 그는 ‘적당한 성장’이란 없다는 입장을 이후에도 견지했던 것 같다. 그의 작고 직후에 나온 기사에 ”경제성장은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 적당한 게 있을 수가 없다“(『흙으로 간 사상이 김종철의 외침 “21세기는 환경과 평화의 세기 돼야”』, 『프레시안』 2020. 6. 25. 최종 수정 2020. 6. 26.)는 생전 발언이 인용됐는데 정확히 언제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나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명언이다. 다만 발언의 해당범위가 세계체제 전체일 때 그렇다. 차원을 개인의 삶으로 낮추면 돈벌이가 지상목표가 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돈벌이를 하고 때로는 꼭 필요한 만큼은 현재보다 더 많이 벌려는 생각이 결코 자가당착이 아닌데—「근대 한국의 이종과제와 녹색담론」에서 나는 “나 자신과 김종철을 이런 개인들 틈에 포함시켜도 되지 않을까”(『이종과제론』 181면; 본서 115면)라고 물었다—정작 문제는 개인도 전세계도 아닌 국가경제가 분석단위가 되었을 때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자본주의와 그 성장논리를 끝장내야겠다는 목적을 지닌 위정자가 애당초 극소수지만, 설혹 그런 의식을 가졌더라도 목적의 실현에 필수불가결한만큼만의 성장을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나라마다 상이한 실정에 맞춰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적당한 성장’을 실현하는 실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난제 중의 난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난제를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 이외의 다른 길이 있을까.⁴³

달리 말하면, 한국의 기업과 정부, 개개 국민을 포함한 경제주체들이 심각한 경제 위축이나 대외적 위상 추락을 겪는 사태가 온다면 근대극복의 실력을 키우는 데 긴요한 근대적응에 큰 차질을 가져온다는 말이다. 물론 대체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어디서 자제하는 것이 적당한 선이며, 어떤 순

43 백낙청(2021a), 「고(故) 김종철과 나」, p. 144.

간부터 과도해지는지를 판단하는 작업은 백낙청이 인정하고 김종철이 비판한대로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적당한 성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논쟁에 앞서 『녹색평론』과 백낙청의 입장이 분명히 갈라진 경우는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였다. 새만금은 지난 8월의 세계 잼버리 대회에 부실로 다시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노태우 정권 때 시작되어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던 간척사업은 2000년대 초반에 방조제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백낙청은 방조제를 완성하여 바닷물을 막음으로써 갯벌이 죽는 환경 재앙을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환경운동과 의견이 완전히 일치했다. 하지만 그는 건축가이자 도시 설계 전문가이고 김석철 교수의 구상에 따라 제방 완공을 포기하되 그때까지 건설된 제방 안쪽의 ‘안바다’를 활용하여 ‘바다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주민의 정당한 발전 요구도 충족시키자는 대안을 지지했다. 그가 보기에 『녹색평론』(2003년 3-4월, 통권 제69호)에 ‘새만금의 망상을 깨자’는 표어와 함께 수록된 글들은 “간척사업이 무슨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존의 망상뿐 아니라, 간척사업을 중단시킬 대안 일체를 너무 쉽게 ‘망상’으로 치부하며 공격한다는 인상”이 강했다.⁴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변혁적 중도주의에 입각한 그의 태도를 잘 보여 주는 발언은 「6·15시대의 대한민국」(2005년의 강연문)의 다음 대목이다.

그나마 환경운동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이만큼의 공론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해온 한 사람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총체적 개혁’에는 반대운동의 자기개혁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무모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야 나무랄 데 없지만, 원상보존 외에는 어떤 대안도 거부한 채 대의명분만 부르짖

44 『녹색평론』의 다음 호인 제70호에 실은 백낙청의 반론이 「새만금 생태보존과 바다도시 논의」이다. 백낙청(2006b), pp. 197-217. 이 글에서 백낙청이 사용한 ‘대안적 발전방식’은 ‘적당한 성장’과 통하는 개념이다.

는 것이 과연 새만금 갯벌의 무수한 생명을 위하는 길이었는가? 비록 오도된 민심일지라도 남들과 대등하게 잘살아보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염원마저 백안시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존중의 자세였는가?⁴⁵

주지하다시피 새만금 갯벌은 결국 방조제가 완공되어 최악의 환경 재앙이 진행 중이며,⁴⁶ 이제는 애초 계획에도 없던 신공항 건설 논의마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에 나온 황윤 감독의 기록영화 <수라>는 본격적인 해수 유통을 통해 아직 숨쉬고 있는 ‘수라갯벌’(제방으로 막힌 새만금 갯벌의 북쪽 지역)을 살릴 수 있음을 감동적으로 보여 주지만, 만약 수라갯벌에 인접한 예정지에 신공항이 건설되면 그런 마지막 희망도 사라진다.

이미 실현이 불가능해진 ‘바다도시’ 건설을 지금 논하는 것은 우스꽝스럽지만, 몰막이 공사 완공 전의 ‘바다도시’ 구상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어쨌든 ‘적당한 성장’은 이중과제론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시금석 격의 쟁점이다. 환경·생태운동에 헌신하는 이들은 대체로 이 발상을 어불성설에 가깝다고 취급하지만,⁴⁷ 최근 들어 기후위기가 정말 절박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적당한 성장’이 현실성을 얻어 가는 것이 국내외의 상황이 아닌가 한다. 지구상의 인류 전체와 국가들이 성장에 매달리는 생태과파적인 자본주의적 사회 운영을 한낱한시에 포기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의미 있는 다수가 김종철의 표현대로 “비근대적인 방식으로 방향전환”하지 않는 한 대전환은 무망하다.⁴⁸ 그렇다면 ‘탈성장’의 대전환으로 갈 구체적인 로

45 백낙청(2006b), p. 29.

46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토건산업의 이해와 개발주의에 익숙한 사회적 풍토, “오도된 민심”과 그것에 편승한 지역 정치인들의 잘못 등이 겹쳐 있지만, 당시 참여정부의 지도력 결핍도 작지 않았다. 백낙청(2006b), 「분단체제와 ‘참여정부’」, p. 56.

47 강경석 외(2020), 「기후위기와 체제전환」, 『창작과비평』, 2020년 겨울(통권 190호), pp. 239-43 참조. 이 좌담에 대한 백낙청의 반응으로 백낙청(2021a), 「기후위기와 근대의 이중과제」, pp. 345-63.

48 대전환과 관련하여 안드레아스 말름(Andreas Malm)이 세계 각국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

드맵을 제시해야 우리 자신과 대중을 설득하는 동시에, 백낙청이 강조하듯이 종종 반(反)자본주의 실천마저 자본축적의 메커니즘 안에 포섭해 버리는 무서운 자본주의와 제대로 맞설 수 있지 않을까? 궁극적인 '탈성장'을 위한 '적당한 성장'이란 정녕 불가능한 것일까?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도입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놓고 이 쟁점을 따져 볼 만하다. 배출권 거래제의 구상이 처음 나왔을 때 서구의 생태운동 진영은 크게 반발했지만, 실제로 실행해본 결과 예상 밖으로 효과가 뛰어나다고 한다.⁴⁹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 나라에서 한 기업이 탄소배출 감축 노력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으면 이를 배출권 시장에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다. 반면에 감축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배출권을 추가로 사야 하는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술혁신과 재생에너지 채택에 노력하게 된다. 이처럼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 기능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동기를 자극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제도다.

물론 목표 달성에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은 것으로 안다. 개별 정부는 자국의 탄소 배출 총량과 함께 개별 기업의 배출량 또한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기업은 감축 압박을 회피하려고 탄소 배출량을 부풀려 신고할 염려가 크다. 또 계속해서 줄여가야 할 배출량 목표 설정은 경제주체 간의 이해 충돌을 포함하여 첨예한 정치적 사안이 되게 마련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기업에게 배출권을 과도하게 배정해 줌으로써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민주적 정부 운영과 기업의 투명성 확보, 시민사회와 녹색운동의 감시와 압력, 나아가 국제 협력과 연대가 모두 잘 작동해야

해 러시아혁명기의 전시 공산주의(1918-1921) 정부처럼 비상하게 대응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기후위기에도 마찬가지로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특정한 국면에서 일시적 정책으로서의 타당할지 모르지만, 대전환의 기본 전략으로서의 비현실적인 관점이라고 본다. 안드레아스 말름(2021),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우석영·장석준 옮김, 마농지.

49 이하의 배출권 거래제 논의는 홍종호(2023),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다산북스, 4장과 5장 참조.

한다. 김종철이 역설했듯이 기후위기 극복은 곧 민주주의의 문제인 것이다. 어쨌든 배출권 거래제가 합당하고 엄격하게 운영된다면 기성 자본주의체제의 시장 기능을 잘 활용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점에서 적응과 극복을 동시에 해내는 셈이다.

유럽연합은 조만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서 국제 교역 질서에도 일대 변화가 닥쳐올 것이다. 가령, 화석연료로 생산한 한국산 철강은 재생에너지를 쓴 유럽산 철강보다 생산비가 저렴한 만큼 이 제도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배출권보다 유럽연합의 배출권이 두 배 이상 비싸고 정책 차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주력산업을 가진 한국이 에너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지 못하면 경쟁력 저하와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다.⁵⁰ 이런 도전에 대한 대응 노력 역시 ‘적당한 성장’의 개념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적당한 성장’ 논의는 에너지전환에 국한하더라도 아직 초입 단계일 뿐이다. 생태운동의 눈으로 볼 때, 석탄발전의 신속한 중단마저도 미적거리며 원전 확대 정책을 펴는 우리 현실에서 ‘적당한 성장’ 운운은 한가한 소리로 들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진정 대전환을 이루려는 실천가나 집단이라면 이 고민을 피하기 어렵고, 피하기 어렵다면 이중과제론의 문제의식에 충실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특히, 백낙청이 김종철이 일본의 평론가 카라타니 코오진보다 우월한 면을 짚으면서 『녹색평론』이 “한국사회에 절실한 녹색담론

50 박상인 교수는 한국의 재벌 총수와 전문경영인들이 RE100 달성의 높은 비용 때문에 국내에서 에너지전환을 외면하고 “국외에 최신 공장을 지어서 RE100과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초단기주의라는 함정」, 『경향신문』 2023년 6월 2일). 이러한 전략 변경은 그 사회적·정치적 파장 탓에 아무리 재벌이라도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겠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까지 겹쳐 대기업 공장의 대규모 해외 이전을 낳는다면, 재벌은 살아남을지 몰라도 국내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국민경제가 흔들려 대다수 국민이 고통받게 된다. 이런 현실도 최소한의 국민경제 유지와 에너지전환의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적당한 성장’의 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과 현장의 실천운동, 인문적 상상력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마음 속의 시인’ 김종철이 주도해서 결합했기 때문에 이론이 아닌 ‘사상’의 경지에 도달”⁵¹했다고 말하는 취지를 늘 되새겨야 한다.

6. 마무리에 대신하여: “문학이라는 또 하나의 정부”

2023년의 시점에서 분단체제극복운동은 큰 위기에 빠져 있다. 분단체제의 기득권층은 윤석열 정부의 집권을 계기로 분단체제를 재공고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마침 미국의 세계질서 재편 구상과 맞아떨어져 한·미·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일에 상당한 진전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선불리 답하려 들기보다는 최근 ‘평화 대 통일’의 잘못된 이분법을 내세우는 논자들의 문제점을 이중과제론의 시각에서 짚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백낙청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선언 이후 “한국 주류사회의 많은 인사들이 갑자기 ‘통일에서 평화로’를 외쳐대는 현상”이 “마치 그동안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오로지 남북 ‘민족주의자’ 탓인 듯이 몰아세우고, 통일을 내세웠다고 보기 힘든 미국이나 통일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⁵² 그런데 2018년 당시와 판이하게 달라진 현정세에서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를 앞세우자는 목소리는 더 커지는 경향이다.⁵³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상

51 백낙청(2021a), pp. 141-42.

52 백낙청(2021a), 「어떤 남북연합을 만들 것인가」, pp. 326-344.

53 최근의 사례만 들자면, 박명림은 『경향신문』에 ‘정전 70년 한반도 영구평화를 향해’라는 제목의 연속 기고문의 첫 글(「정전 70년…미·중 갈등 속 한국전쟁 재조명, ‘한반도 평화체제’의 출발점」, 2023년 6월 20일)에서 “전후 두 한국 관계의 본질과 성격, 전개와 궤적에 대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계가 남한 대 북

황을 악화시키는 가운데 실제로 이런 목소리가 앞으로 얼마나 호소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다.⁵⁴

이중과제론의 관점으로 보자면, 통일 아닌 평화의 주창은 근대극복의 의지가 흔들린 탓에(혹은 애초부터 그런 의지가 없거나 박약했던 탓에) 한반도의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라는 근대적응에도 실패할 위험이 크다. 당장 서재정 교수가 꼼꼼히 짚고 있듯이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잠깐의 실수가 대규모 군사충돌을 유발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점에 대해 평화 주창자들은 애써 눈을 감고 있다.⁵⁵ 더구나 평화 주창자들의 생각처럼 남과 북이 정상적인 국민국가로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들, 즉 남쪽에 국한하더라도 헌법의 영토와 통일 관련 조항의 개정,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이 남북연합 추진보다 더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기도 불가능하다.⁵⁶ 나아가 통일

한, 즉 남북관계가 아니라, 한국 대 조선, 즉 한·조관계였음을 밝히려 한다. 한·조관계로의 시각 전환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바른길이 통일이 아니라 평화요, 통일 추구가 아니라 평화공존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고 말한다. 문학평론가 김명인도 언론 기고(「한반도, 단호한 냉정이 필요하다」, 『한겨레신문』, 2023년 8월 4일)에서 "지난 70년 동안이나 지금이나 한반도 문제는 결국 북-미 간의 문제라고 한다면, 남한이 과감히 한반도 문제에 손을 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이웃 나라"로 간주하고 대한민국의 국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 헌법 조항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를 통해 남과 북이 두 개의 국가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 54 백낙청은 최근 백낙청TV의 대담에서 지금의 극히 경색된 남북관계에서도 남북연합 외에는 길이 없음을 설교하고 있으며, 남북연합 진전 없이는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이 가능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백낙청(2023a), (2023b) 참조.
- 55 서재정(2023), 「위기의 한반도, 긴장의 동북아: '선제타격' 독트린의 득세와 전쟁의 가능성」, 『창작과비평』 가을호(통권 201호), pp. 312-330 참조.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정옥식(2023), 『한반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서해문집.
- 56 김상준은 평화 주창자들과 논리가 유사하지만 분단체제론을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양국체제론'을 제기한 바 있으며, 나의 비판을 재반박한 바 있다. 김상준(2018), 「양국체제론과 분단체제론: 상호 이해를 위한 서장」, 『문화과학』 겨울호(통권 96호), pp. 114-54; 김상준(2019a),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녹색평론』 1·2월호(통권 164호), pp. 37-65 참조. 나의 '양국체제론' 비판은 김명환(2019b), 「한반도 평화와 분단극복을 위하여」,

보다 평화를 앞세우는 담론은 지금의 세계체제가 기후위기와 전지구적 사회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순탄하게 굴러갈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현실순응적인 전제는 근거도 부족할뿐더러 평화가 통일보다 더 보편적인 가치라는 사실로도 가릴 수 없는 근본적 약점, 즉 근대극복의 문제의식이 사라진 한계를 드러낸다. 오늘의 대학과 학문사회는 이처럼 현실추수적 자세의 문제를 극복하는 노력에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 특히 문학연구자라면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우리 작가들에게 남북연합의 전망이 “위대한 문학이라는 또 하나의 정부”, 즉 “남북 민중 모두가 분단체제 속에서 잠들지 않고 슬기로운 하나됨을 성취하도록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스려주는 권력 아닌 권력”⁵⁷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믿을 일이다.

참고문헌

1. 백낙청 저작

- 백낙청(2023a), 「[백낙청공부길 085] 분단체제에 대한 오해와…」, 백낙청TV, 2023.11.19.
<https://www.youtube.com/watch?v=dvTC8xEwDEw>
- 백낙청(2023b), 「[백낙청공부길 086] 헌정 중단상태 끝내고…」, 백낙청TV, 2023.11.26.
<https://www.youtube.com/watch?v=aBVK2UG8miU>
- 백낙청(2022; 1990), 『민족문학의 새 단계』, 창비.
- 백낙청(2021a),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만들기』, 창비.
- 백낙청(2021b), 『서양의 개혁사상가 D. H. 로런스』, 창비.
- 백낙청(2021; 1994),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비.
- 백낙청(2016),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개혁: 백낙청의 원불교 공부』, 모시는사람들.
- 백낙청(2009),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 창비.
- 백낙청(2006a), 『통일시대 한국문학의 보람』, 창비.

『녹색평론』 3·4월호(통권 165호), pp. 106-116. 김상준의 재반박은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의 분단체제-양국체제 논쟁」, 『프레시안』, 2019년 4월 24일.

57 백낙청(2021; 1994), pp. 317-18.

- 백낙청(2006b),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창비.
- 백낙청(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창비.
- 백낙청·김용옥·박만수(2021), 「다시 동학을 찾아 오늘의 길을 묻다」, 『창작과비평』 가을호(통권 193호), pp. 81-134.
- 백낙청·안병직 외(1993), 「한국 근대사회의 형성과 근대성의 문제」, 『창작과비평』 겨울호(통권 82호), pp. 48-91.
- 백낙청 외(2023), 『백낙청 회화록 8: 2017~2022』, 창비.
- 백낙청 외(2018), 『문명의 대전환을 공부하다: 이중과제론과 문명전환론』, 박윤철(박맹수) 엮음, 창비.
- 백낙청 외(2018), 『변화의 시대를 공부하다: 분단체제론과 변혁적 중도주의』, 창비.
- 백낙청 외(2017a), 『백낙청 회화록 6: 2007~2012』, 창비.
- 백낙청 외(2017b), 『백낙청 회화록 7: 2012~2017』, 창비.
- 백낙청 외(2007a), 『백낙청 회화록 3: 1990~1997』, 창비.
- 백낙청 외(2007b), 『백낙청 회화록 4: 1997~2004』, 창비.
- 백낙청 외(2007c), 『백낙청 회화록 5: 2005~2007』, 창비.
- 백낙청 외(1993), 「한국 근대사회의 형성과 근대성 문제」, 『창작과비평』, 1993년 겨울호, 통권 82호, pp. 48-91.
- Paik, Nak-chung (2015), "The Double Project of Modernity," *New Left Review*, 95 (Sept./Oct.), pp. 65-81.
- Paik, Nak-chung (2000), "Coloniality in Korea and a South Korean Project of Overcoming Modernity," *Interven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ostcolonial Studies* 2(1), pp. 73-86.
- Paik, Nak-chung (1996), "Habermas on National Unification in Germany and Korea," *New Left Review*, 1/219 (Sept./Oct.), pp. 14-21.

2. 2차 자료

- 강경석·김선철·정건화·채효정(2020), 「기후위기와 체제전환」, 『창작과비평』 겨울호(통권 190호), pp. 223-51.
- 김명인(2023), 「한반도, 단호한 냉정이 필요하다」, 『한겨레신문』, 2023년 8월 4일.
- 김명환(2019), 「한반도 평화와 분단극복을 위하여」 『녹색평론』 3·4월호(통권 165호), pp. 106-16.
- 김상준(2019a),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녹색평론』 1·2월호(통권 164호), pp. 37-65.
- 김상준(2019b),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의 분단체제-양국체제 논쟁」, 『프레시안』, 2019년 4월 24일.
- 김상준(2018), 「양국체제론과 분단체제론: 상호 이해를 위한 서장」, 『문화과학』 겨울호(통권 96호), pp. 114-154.

- 김중철(2008), 「민주주의, 성장논리, 農的 순환사회」, 『창작과비평』 봄호(통권 139호), pp. 67-90.
- 김중철·이문재(2008), 「이것은 문학이 아니다」, 『문학동네』 겨울호, pp. 26-65.
- 말름, 안드레아스(2021), 우석영·장석준 옮김,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마농지.
- 박명림(2023), 「정전 70년…미·중 갈등 속 한국전쟁 재조명, ‘한반도 평화체제’의 출발점」, 『경향신문』, 2023년 6월 20일.
- 박상인(2023), 「초단기주의라는 함정」, 『경향신문』, 2023년 6월 2일.
- 서재정(2023), 「위기의 한반도, 긴장의 동북아: ‘선제타격’ 독트린의 득세와 전쟁의 가능성」, 『창작과비평』 가을호(통권 201호), pp. 312-330.
- 손호철(2006), 「남남갈등의 남남갈등을 넘어서:[논쟁] 뉴라이트와 분단체제론의 비판적 고찰」, 『프레시안』, 2006년 11월 28일; 『진보평론』 겨울호(통권 30호), pp. 216-230.
- 이남주 엮음(2009), 『이중과제론: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 창비.
- 이남주(2023), 「문명 전환 시대, ‘한국’을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창작과비평』 가을호(통권 201호), pp. 17-34.
- 이우창(2017), 「‘서구 근대’의 위기와 한국 동아시아 담론의 기이한 여정: 민족문학론에서 반민주주의론까지, 1989-2017」, 『코기토』 83, pp. 58-116.
- 정육식(2023), 『한반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서해문집.
- 천정환(2018), 「탈근대론과 한국 지식문화(1987~2016): 전개 과정과 계기들」, 『민족문학사연구』 통권 67호, pp. 55-96.
- 홍중호(2023),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다산북스.

원고 접수일: 2023년 10월 11일, 심사완료일: 2023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20일

ABSTRACT

Toward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Double Project of Modernity”

Kim, Myung-hwan*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discourse on “the double project of modernity,” propounded by Paik Nak-chung, a towering presence for decades in the Korean literary scene and the civil movements as well. He presents the doctrine of “the double project of simultaneously adapting to and overcoming modernity” in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1998, an idea always working in a seminal state behind his critical works from the late 1960s. In the 1990s, however, having come to realize the *systemic* nature of the national division of Korea, Paik begins to give a full account of how we will overcome the national division: we have to create a kind of flexible confed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at will enable us to carry out the double project of modernity. Under the current escalating political and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of particular importance for academics in Korean higher education to address challenges Paik’s discourse poses.

Keywords Paik Nak-chung, The Double Project of Modernity, The Discourse on the Division System, Transformative Middle Way, Confed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dequate Growth

*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